

# 국민연금, 환율 구원투수 되나… 주초 대규모 환 헤지 관측

원·달러 환율 1400원 후반대 지속  
연말 증가 ‘레벨’ 관리 필요한 상황  
시장, ‘국민연금 역할론’ 관심 집중

국민연금이 원·달러 환율 수준을 낮추기 위해 이르면 이번 주 초부터 대규모 환 헤지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연말 증가 기준 환율이 기업과 금융기관 재무 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부와 한국은행이 특단의 단기 처방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의 연장선이다. 한은은 지난주 사상 처음으로 금융기관의 외화예금 초과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밝히며, 공개적으로 외환스와프 확대 대비에 나섰다.

## ◆연말 환율 증가 ‘레벨’ 관리해야

21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지난 20일 새벽 야간 거래에서 1478.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최근 환율은 달러 약세 흐름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환율은 지난 17일 장중 1482.1원까지 치솟아 미국 관세 충격이 거셌던 올해 4



지난 1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증가가 표시되어 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거래 증가(1478.3원)보다 2.0원 내린 1476.3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뉴시스

월 9일(1487.6원) 이후 8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미 지난달 말 원화의 실질실효환율은 87.1까지 하락,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4월 말(85.5) 이후 16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외환 당국은 올해 거주자 해외증권투자 규모가 사상 최대인 경상수지 흑자를 넘어 과도하게 불어나면서 환율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17일 불가 설명회에서 “내부적 요인으로 환율이 불

필요하게 올라간 부분이 있다”며 “변동성뿐 아니라 레벨(수준)도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는 30일 결정되는 환율 연말 증가를 가급적 낮추는 일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연말 증가는 일선 기업과 금융기관 등의 내년 재무제표 작성 기준이 되기 때문에 ‘레벨’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국민연금, 환헤지 나설까

시장에서는 외환시장 ‘큰 손’인 국민연금 역할론에 시장 관심이 쏠린다. 국

민연금이 한은과의 외환스와프를 통해 대규모 환 헤지에 나설 경우 수급 불균형이 일시 해소되면서 환율이 단기적으로 눈에 띄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 한 관계자는 “통상 전략적 환 헤지가 한번 시작되면 상당 기간 대규모로 이뤄지는 만큼 단순히 연말 환율 증가를 낮추는 데 그치지 않고 내년 상반기 시장 안정까지 염두에 둘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통화스와프는 정해진 기간 내 다른 통화와 서로 교환하는 계약이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은 해외 투자를 할 때 필요한 달러를 외환시장이 아닌 한은의 외환보유고에서 조달할 수 있다. 국민연금이 대규모 해외 투자를 하는 만큼 필요한 달러를 시장에서 직접 사들이면 원·달러 환율이 상승압박을 받는데, 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그만큼 외환보유액이 줄어든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외환 당국은 지난주부터 국민연금 환헤지 본격화를 공공연히 예고해왔다.

윤경수 한은 국제국장은 지난 19일 기자들에게 “국민연금과 외환스와프가 일부 재개된 게 사실”이라며 “국민연금이

환 헤지를 유연하게 해서, 그에 따른 스와프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한은이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금융기관의 외화예금 초과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밝힌 것도 국민연금 환 헤지와 연계된 ‘사전 포석’으로 풀이된다.

대규모 환 헤지로 외환스와프 거래가 늘면 그만큼 한은이 보유한 달러가 줄면서 외환보유액이 감소하게 되는데, 해외보다 높은 이자를 주는 대신 금융기관 외화예금 지급준비금을 평소보다 더 많이 예치 받아 그 감소분을 메우려는 계산인 셈이다.

일각에서는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불러야 하는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를 위해 이용하는 것이 무책임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송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무책임한 일을 중단하라”며 “정부와 통화당국은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 우선 시장에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을 흡수해서 환율과 금리 불안을 동시에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 금감원, 금융지주·은행 운영 실태점검 결과 발표

# 임원 셀프점검 등 다수 금융사 이해상충 우려

‘제보·신고 강화’ 일부 모범사례 확인  
‘위임 구조부실·감독기능 부족’ 과제도

금융감독원이 책무구조도 제도 시행 이후 금융지주와 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한 첫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일부 모범 사례가 확인됐지만, 대표이사 총괄 관리의무 위임 과정에서의 이해상충 소지와 이사회 감독 기능의 형식적 운영 등 보완 과제도 다수 드러났다는 평가다.

금감원은 21일 금융지주·은행의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체계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대상은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금융지주·은행 중 정기검사 대상 등을 제외한 40곳으로, 일부 금융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도 병행됐다.

점검 결과, 일부 금융사는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의무 이행 과정에서 제재운영



금융감독원 전경. /손진영 기자

지침을 반영해 관리조치 사유를 확대하고, 제보·신고 체계를 강화하는 등 비교적 충실한 내부통제 운영 사례를 보인 것으로 평가됐다. 특정 상품이나 사업 부문에 대한 점검 시 재무 지표뿐 아니라 비재무 지표를 함께 활용하거나, 성과평가 지표(KPI)에 금융사고 예방 요소를 반영하는 사례도 모범 사례로 제시됐다.

반면 다수 금융사에서는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의무를 소관 임원에게 위임하는 과정에서 임원이 자신의 관리조치를 스

로 점검하는 구조가 형성돼 이해상충 우려가 제기됐다. 위임 근거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대표이사의 책임이 임원에게 전가될 소지가 있는 사례도 확인됐다.

또 대표이사의 총괄 관리의무와 임원의 개별 관리의무가 혼재돼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었으며, 위험관리 정책을 전사적으로 집행·점검하는 체계가 미흡한 금융사도 적지 않았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동일·유사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역시 형식적 점검에 그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사회와 내부통제위원회의 감독 기능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꼽혔다. 총괄 관리의무 이행 보고가 단순 나열식에 그치거나, 위원들이 심도 있게 평가·논의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이 미비해 감독 기능이 형식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

## “실손24 서비스, 네이버·토스로 이용하세요”

### 금감원 Q&A

####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실손보험금 청구할 때마다 서류 챙기고, 어디로 제출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절차를 밟는 과정이 번거로웠을 텐데요.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감독당국은 그간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는 소비자(보험계약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및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회사로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하는 제도입니다. 병원·보건소(2024년 10월, 1단계)를 거쳐 의원·약국(2025년 10월, 2단계)까지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확대 시행 후 한 달 만에 실손24에 연계된 요양기관 수는 2만3102개(2025년 11월 25일 기준)로 전체 10만4295개 요양기관의 22.0% 수준에 달했습니다.

올해 11월 28일부터는 온라인 플랫폼인 네이버와 토스에서 실손24 서비스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실손보험계약을 보유한 국민 누구나 실손24 앱 설치나 회원가입 없이도 네이버와 토스를 통해 가입 보험사 조회부터 보험금 청구까지 전 과정을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플랫폼 내에서도 기존 실손24서비스와 같이 높은 수준의 보안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특히 네이버와 토스는 병원 예약 등 플랫폼 서비스와 연계해 병원 예약부터 보험금 청구까지 원 스톱(One-stop)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에 등록된 결제수단을 이용해 실손24 연계 병원에서 결제하는 경우 ‘보험금 청구 푸시(push) 알림’을 보내 청구를 누락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실손보험금 청구가 필요하신 경우, 이번에 확대된 경로를 활용해 보다 간편하게 처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허정윤 기자

## 금감원, 공모펀드 상품설명 손 본다

### ‘통합 핵심설명서’ 도입 방침

금융감독원이 공모펀드 상품설명 체계를 전면 손질한다. 투자자 이해를 어렵게 했던 중복·과잉 설명을 줄이고, 핵심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설명서를 통합·개편한다는 구상이다.

금감원은 공모펀드 상품설명 합리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 운영 결과를 발표하고, 설명서 구조 개편과 설명 관행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은 분산·중복된 설명 항목을 하나로 모은 ‘통합 핵심설명서’를 도입할 방침이다. 상품명, 위험등급, 주요 투자위험, 손실 발생 가능성, 수수료·과세, 환매 조건 등 핵심 정보를 중심으로 설명서 구조를 재편하고, 상품 이해에 필요한 고유 정보는 보다 직관적으로 배치할 방침이다. 운용사와 판매사 간 설명서 구성도 통일해 소비자가 어느 창구에서든 동일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설명서 내용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금융회사 내부에서 설명서를 사전에 심의할 때 소비자 이해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준법감시인이나 최고준법감시책임자(CC O)의 책임 하에 심사 기능을 강화한다. 또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용어 사용을 위해 소비자단체와 함께 설명서 용어 순화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설명서 정비 기준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수의 펀드를 동시에 권유하는 경우 공통 사항은 한 번만 설명하도록 허용하고, 원금 손실 위험이 극히 낮은 초저위험 공모펀드에 대해서는 투자자 성향 평가 절차를 일부 합리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허정윤 기자

## 현대차증권, ‘가족친화인증기업’ 재선정

### 증권사 유일 4회 연속 인증

현대차증권(대표 배형근·사진)은 성평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재선정되면서 오는 2028년 11월 30일까지 가족친화기업 인증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2017년 취득 이후 4회 연속으로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은 증권사 중 현대차증권이 유일하다.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5조 1항에 의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



부가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제도 실행,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등의 항목으로 나눠 평가한다.

현대차증권 관계자는 “이번 인증은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중시해 온 가족친화경영의 성과를 입증한 결과”라며 “업계 유일 4회 연속 인증을 획득한 만큼 더욱 책임감을 갖고 가족과 함께하는 기업 문화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